

與사면론 설왕설래... “반성 없인 무의미” “대통령 결단 문제”

박수현 “당사자 반성과 사죄 없는 사면은 무의미”
 홍익표 “언젠가는 제기될 사안... 선거용은 아니다”
 김한정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 野, 말 가려서 하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 여론에서는 5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개인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께서 정치적 결단과 선택으로 사면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사면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라며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국민의 공감을 더욱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리고 문

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것은 이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마 올해 1월14일에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 이후에는 원하던 원하지 않든 사면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라며 “(대통령은) 어느 형태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아마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의고민,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겠다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해해볼 수 있겠다 정도의 발언이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중정과 선의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한 측면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여러 가지 소통과 절차를 통해 말씀하셨더라면 훨씬 더 공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

을 겸임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론을 띄운 것은 아니라고 했다.

홍 의원은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며 “(이 대표는) 언젠가지 광화문광장의 태극기부대, 서초동 집회 등 사회적 양극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는 마음에서 충정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선거용은 아니다”라며 “이 대표 개인 입장으로는 정치적으로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될 부분은 아니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은 아직 두 대통령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사면론’이 공론화되자 “논란과 반대가 있겠지만 잘한 판단”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던 김한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며 찬성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던 김중근씨를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노사정협의체를 가동해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구조조정을 했다”라며 “그 결과 10년도 넘게 걸린다는 외환위기 극복을 2년 만에 졸업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도 국난극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남들이 했으면 하지만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본질적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달 중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 등 국민적 논란에 대해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는 당사자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의 주장에 “장난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말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며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도록 야당도 말조심하고, 분개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 자세를 전환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면론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4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서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 이익이나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단하면 수용하시는 게 옳

다”라며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셨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지도자로서 사과 같은 것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옳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회동 마친 여야 원내대표 김태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백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8일에는 여야가 합의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 김태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김희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차별금지법 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종류 따라 보수 차별 존재
 사회복지사 등 처우·지위 향상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희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설별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는 데에만 그치면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급여 차별로 인한 박탈감 해소와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따르면,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